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웅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42
----------	------

발의연월일 : 2020. 12. 30.

발 의 자 : 조웅천 · 주철현 · 박성준
홍기원 · 최기상 · 김희재
한준호 · 송재호 · 문진석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2016헌마889).

현행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생활하거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취득과 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국적선택절차에 대해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

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복수국적자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 태어나 신청시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여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및 제22조 등).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근거를 장기간 외국에 두고 생활해 온 경우
2.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고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14조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제2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22조를 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국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생략) <u><신 설></u>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u> <u>1.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근거를 장기간 외국에 두고 생활해 온 경우</u> <u>2.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고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u>
<u>②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u>	<u>③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u>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
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제2항
에 따라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와-----
-.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적의 이탈 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적심의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p><u><신 설></u></p> <p><u>제22조</u>(권한의 위임) (생략)</p>	<p>② <u>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u>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u>제23조</u>(권한의 위임) (현행 제22조와 같음)</p>
---	---